

#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의원입니다.
- 제333회 정례회에 본 의원이 제안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이 결의안은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다루는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와 직결된 사안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내건축공사는 계약 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인건비 미구분, 변경계약 미체결, 그리고 하자보수 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무자격 시공,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전기·가스·배관과 같은 핵심 건설기술 요소가 충분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시민의 주거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할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등록·도급·하자·안전 등 핵심 사무가 모두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실질적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시민 피해를 반복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 이에 본 결의안은 다음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법제 마련입니다. 표준계약서, 공사신고 절차, 안전관리·하자보수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둘째, 시공자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면허·보험 확인제, 공정별 하자 기간 명문화 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셋째, 불공정 계약행위 방지입니다.

표준계약서 및 견적 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 넷째, 지방정부 역할 확대입니다.

지자체가 신고·관리·분쟁조정 등 기본적인 행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는 규모는 작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사입니다.

이제는 제도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결의안이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